2025. 12. 12.(금)
제4차 본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1024

제출연월일: 2025. 12. 12.
제 출 자: 건설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25. 11. 14.(금) ~ 2025. 11. 21.(금)〔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4호)
가. 도시디자인담당관 나. 시민안전담당관 다. 재난대응담당관 라. 신청사건립단 마. 도시주택정책실 바. 교통국 사. 도시혁신국 아. 상하수도사업소 자. 도로건설사업소 차.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 (각 구청 안전건설과・교통행정과・건축과, 덕양구 건축물관리과) 카.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정비처)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건설교통 위 원 회	9명	김미경	김민숙, 고덕희, 김학영, 김해련, 원종범, 이영훈, 임홍열, 최규진	전문위원	김두한
				주 무 관	이동훈
				주 무 관	정수희
				정책지원관	김승현
				정책지원관	김봉운
				정책지원관	허창배
				정책지원관	임동준
				정책지원관	윤 열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 14. (금)	14:00~ 18:00	○ 시민안전담당관 ○ 재난대응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회 회의실	감사	
○ 11. 15.(토) ~ 11. 16.(일)					
11. 17. (월)	10:00~ 16:00	○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8:00	○ 신청사건립단	위원회 회의실	감사	
11. 18. (화)	10:00~ 12:00	○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14:00~ 16:00	○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16:00~ 18:00	○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11. 19. (수)	10:00~ 16:00	○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8:00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1. 20. (목)	10:00~ 16:00	○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 18:00	○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정비처)	위원회 회의실	감사	
11. 21. (금)	10:00~ 12:00	○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2: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다. 감사방법 및 증인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실적 보고 ⇨ 질의답변

2) 증인 출석 현황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총계		**46명**			
도시디자인담당관 (1명)	담 당 관	김 명 진	2025. 11. 14. 14: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시민안전담당관 (1명)	담 당 관	김 기 태	2025. 11. 14. 14: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재난대응담당관 (1명)	담 당 관	박 성 완	2025. 11. 14. 14: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신청사건립단 (1명)	단 장	김 성 호	2025. 11. 17. 16: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도시주택정책실 (6명)	실 장	서 윤 하	2025. 11. 17. 10: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도시계획정책관	유 제 학			
	주 택 과 장	이 성 실			
	건축정책과장	김 진 원			
	토지정보과장	안 수 민			
	스마트시티과장	안 동 수			
교통국 (5명)	국 장	주 시 운	2025. 11. 20. 10: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교통정책과장	김 환 덕			
	버스정책과장	장 문 순			
	주차교통과장	유 진 상			
	도로정책과장	정 일 형			
도시혁신국 (4명)	국 장	조 용 주	2025. 11. 19. 10: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신도시정비과	김 교 철			
	도시정비과장	유 호 권			
	도시개발과	안 하 림			
상하수도사업소 (4명)	소 장	이 재 학	2025. 11. 19. 16: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수도행정과장	이 원 형			
	수도시설과장	이 종 선			
	하수행정과장	김 동 욱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및 장소		비고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일시	장소	
도로건설사업소 (4명)	소 장	채 만 식	2025. 11. 21. 10: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공 사 과 장	김 진 철			
	도로관리과장	이 인 석			
	차량등록과장	안 미 경			
덕양구청 (5명)	구 청 장	한 찬 희	2025. 11. 18. 10:00	덕양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윤 광 옥			
	교통행정과장	박 기 명			
	건 축 과 장	박 문 희			
	건축물관리과장	안 정 국			
일산동구청 (4명)	구 청 장	박 노 선	2025. 11. 18. 14:00	일산동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정 달 용			
	교통행정과장	권 혁 진			
	건 축 과 장	표 명 섭			
일산서구청 (4명)	구 청 장	신 영 호	2025. 11. 18. 16:00	일산서구청 회의실	
	안전건설과장	전 찬 주			
	교통행정과장	이 주 훈			
	건 축 과 장	백 진 규			
고양도시관리공사 (6명)	사 장	강 승 필	2025. 11. 20. 16:00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도시교통본부장	황 경 호			
	도시전략처장	조 인 동			
	도시개발처장	김 승 용			
	도시정비처장	정 광 섭			
	교통사업처장	김 정 식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디자인담당관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향후 착수할 시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진행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용역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업무보고 실적 자료에 선도적 건축 문화 추진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 제도를 활용했음에도 실질적인 공공건축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공 건축물의 경우는 시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제도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람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반해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좋은 건축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건축된 일산동구 보건소의 경우 공공 건축물로서 좋은 건축물인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음. 향후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경관심의를 받는 민간 건축물의 경우 고양시의 실정과는 동 떨어지게 과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음. 고양시의 실정에 맞게 주변환경과 걸맞은 경관심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함 ○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내용을 본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위원회와 본위원회를 구분해서 진행하는지 의문임. 두 위원회가 선후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위원회와 본위원회를 구분하지 말아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특정 지역에 간판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최초 예산을 올린 이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도로 포장 및 차로 조정까지 언급하며 사업비가 커졌는데, 막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의 조정이 없어 부서의 반대로 전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부분을 지적함.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주기 바람. ○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고양시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음. 향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대상지의 주변 환경을 면밀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심의위원들이 심의 대상지에 대한 환경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챙겨주기 바람. ○ 경관위원회 안건이 소위원회나 본위원회에 상정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질의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경관까지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는데, 굳이 경관심의가 도시계획심의보다 선행하여 진행되면서 사업 시행의 기간을 늘어지게 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지적함. 향후 경관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람 ○ 민선 8기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 되는 현재도 여전히 고양시 시기(市旗)가 없는 점을 지적함.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기를 빨리 제작, 게양하기 바람. ○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예산담당관에서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를 단순히 입출금 통장에 예치하는 것은 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기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금은 향후 지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람. ○ 부서에서 고양시 지정게시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위탁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반 수입 대신 기금 수입으로 해 향후 노후 간판 개선사업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람. ○ 경관심의의 경우 타 심의와 함께 통합심의 하라는 권고가 지난 23년에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통합심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 하루빨리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람 ○ 다양한 사업들은 허가를 내주는 부서들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계획을 총괄해야 하는데, 현재는 경관심의가 사실상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향후 경관심의가 전반적인 사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고양시의 경우 구 도심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혹은 정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음에도, 경관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쉬움.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구 도심지 원주민들은 막대한 상실감 및 금전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심의를 심도있게 해주기 바람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불법 현수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 작년과 크게 바뀐 점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함. 현수기에 대한 문제 제기의 초점은 도시미관인데, 현수막 게시 가능 공간이 1년 만에 오히려 증가한 것은 최초 문제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향후 도시미관까지 고려하여 현수기 게첩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민안전담당관	○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공공 공사현장, 민간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많이 생기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 불법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은 문제이지만 혹여라도 건축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정 규모가 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부서에서 챙겨주기 바람
재난대응담당관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공사 현황 파악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빈번한 극한호우에 따른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설치를 요구함 ○ 올해 여름 극한호우 발생시 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우수관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문의하며, 향후 용량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우수관로 준설이 계획된 곳에 대해 가능한 우기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설을 하여 선제적인 재해 예방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함 ○ 시민안전보험 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수혜를 받으시는 분의 실적이 적은 부분을 지적함. 향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추가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 덕이동 66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불승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덕이동 1256-36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회원 모집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주기 바람 ○ 현재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청회 이후 주민 공람기간 중에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하부 계획 중 하나인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는데, 별도의 임명장 수여 등의 행정 절차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함 ○ 1기 신도시 용적률이 타 도시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백마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주민 제안이 취하된 24년 4월 이후 도시관리공사에서 공공개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의회에 내용에 대한 사전 공유 없이 시가화예정용지에 일방적으로 공공개발 용역을 추진한 부분을 지적함. 향후 이러한 큰 규모의 개발과 용역 관련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 도시기본계획 내 ‘도시공간전략계획의 민선 8기 도시정책 선제적 방향 설정’에서 도시정책 선제적 방향은 무엇인지 질의함. 향후 자족용지 확보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자족용지를 자족시설로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만들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기 바라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며, 과업지시서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 잘 확인해주기 바람 ○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의 착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질의함. GB해제취락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지금까지 과도한 규제에 피해를 보셨는데, 계획수립에만 그치지 말고 시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향후 대책 마련 및 대응을 당부함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부동산업을 담당하는 특정 인물이 과거에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등을 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등 모든 자리를 해촉당한 전력을 지적함. 물론, 해당 인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정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적절한지 파악하여 해촉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람 ○ 도시개발과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근거하여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라며 사전 자문을 받았으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인데도, 도시개발과장이 요청한 사항을 전결규칙에 맞지 않게 시장이 부의했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의뢰로 상정한 것은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함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 중 한 사람인 도시주택정책실장이 사무전결규칙 상 제2부시장 전결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방안 구상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 시 취락지구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람. 또한 취락지구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같이 마련해주기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경우 전체 심의 현황 중 원안 수용 비율이 현격히 낮고, 재심의의 경우 최초 심의 시 제시된 조건을 시정해서 다음에 심의받으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향후 수립계획을 잘 챙겨주기 바람 ○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용역과 관련해 군사보안 문제 때문에 이전할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전한 다음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주기를 바람 ○ 식사PFV 단기차입금 마감일이 7월 21일인데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연간 회의 일정에 따르면 7월 30일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하계 휴가기간을 핑계로 7월 16일로 앞당겨 진행한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함 ○ 품위손상을 이유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품위유지 위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회 법률고문의 법률자문 결과 해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는다는 의견이 지배적. 선출직 공직자를 전례 없는 사유로 해촉한 부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과 의회의 우려를 전달함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지 않도록 숙고해주기 바라며, 민간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부서가 사업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함 ○ 도래울 바람물공원의 경우 인근 지역에 젊은 인구들이 많아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물놀이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긴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별다른 협의 없이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을 해촉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해촉철회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만큼 향후 해촉으로 인한 결원을 추가 임명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	○ 덕이동 1256-36 일대만이 아니라 일산동구 인근에도 반값 임대주택이라는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고 있음. 시에서 적극적으로 현수막 철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해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해주기 바람 ○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정해져 있는 예산 대비 실제 지원하는 가구의 수가 너무 적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사업을 시행하기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전에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원 규모를 수요에 맞게 증가시켜주는 것을 고려해주기 바람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현황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300세대 기준이고 사업 승인의 경우도 다름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의무관리대상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의 경우 2025년 지원 대상지가 서구 7곳, 동구 2곳이지만 덕양구는 지원대상 지역이 한 곳도 없음. 덕양구가 동구나 서구에 비해 노후 공공주택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노후 공동주택 비율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 건축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이후 조정을 받아봐야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듯 고양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가능한지 검토하여 운영해주기 바람. ○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매년 실태조사 및 주의관찰 대상지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향후 지정검토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될 경우 행정청의 처리 계획에 대해 질의함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경우 25년도 사업 지원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정책실 (토지정보과)	○ 업무추진실적 상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에서 토지투기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함. 실제로 적법하게 사업하는 분들마저 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향후 용어 사용을 개선해 주기 바람 ○ 개발사업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에게 산정식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은 지적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시민 재산권 확보 및 갈등 분쟁 조정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람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 수가 일산동구와 서구에 비해 덕양구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함. 그린벨트 인허가 건수가 많아서 그렇더 하더라도 기각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며, 향후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중 부가세는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아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은 실정임. 사업의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만큼 보다 자세하게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줄 것을 당부함 ○ 식사 데이터센터 내 유류저장고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대규모 주택단지 인근에 유류저장고가 들어올 경우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 사고 등과 결부된 안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시주택정책실 (스마트시티과)	○ 성사혁신지구 내 스마트안전센터가 조성된 이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매우 만족해 하심. 어렵게 조성된 스마트안전센터이니 만큼 향후 운영을 잘 해주기 바람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신청을 23년 2월에 하고, 4월에 선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던가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비가 10~20% 정도 투입되는데 비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의 투입 비율이 50%로 시비가 200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신청사건립단	○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기초조사가 시행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와 관련된 토지보상 공고까지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 기존 용역 계약한 ㈜나우동인에서 기존 신청사 건립이 무산될 시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이 왔는데, 이로 인해 향후 발생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함 ○ 경기도 투자심사, 주민소송 결과로 인해 백석동으로의 청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 이제 주교동 신청사 건립만이 남았는데, 향후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신청사건립단에서 경기도에 투자심사 의뢰한 내용 중 ‘타당성 조사완료’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함. 해당 타당성조사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청사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이므로, 시의 논리가 맞지 않음을 지적함 ○ 2023년 1월 30일 고양연구원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었으면, 타당성 조사 의뢰 계획에 있었을텐데 2023년 1차 추경에 해당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함을 지적함 ○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에 타당성 조사를 1차 추경에 편경할 수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배정된 예산 없이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명시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청사건립단의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을 지적함 ○ 신청사건립단 삼 중에 신청사 건립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함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덕양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개수에 대해 질의함.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 대형 공사일수록 안전관리와 민원대응이 필수적이기에 주민 피해 최소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람 ○ 덕양구 데이터센터 내 유류저장고 용량에 대해 질의함. 고압전선이 들어가는데 법에 나와있는대로 1m 깊이에 매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을 지적함. 규정 상 1m만 매설해도 문제가 없을지라도 초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부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주민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관내 진행되는 공사 중 70%에 가까운 건 관외업체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공사를 수행 중인데, 관내 건설업 진흥을 위해 힘 써주기 바람 ○ 덕양구가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청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설해로 인한 제설작업 시 작업자 분들이 과도하게 제설제를 사용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분들이 있음. 과도한 제설제 도포는 도로 및 자연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을 소로길과 같은 곳의 경우 제설제가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설제 살포를 자제해주기 바람 ○ 올 여름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자연부락 배수펌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한해 경찰청과 적극 협의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상업지역에 한해서라도 저녁 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해주기 바람
덕양구청 (건축과)	○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신청 건수 현황에 대해 질의함. 물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이 맞지만, 환경적 관점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할 것임 ○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하고 민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함.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표준 검토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람 ○ 최근 건축허가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처리되어 있으나 일부가 사유지로 남아 통행, 안전, 유지관리, 법적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수 있음. 이에 건축허가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허가는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만큼 이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바람 ○ 산황산 골프장 증설 관련 착공 전 그린벨트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덕양구에 GB 개발 행위허가 요청 관련 접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함 ○ 지역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재건축 재능기부 건수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9건에 불과한데, 아무리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를 업무 추진성과로 홍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지적함 ○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있으며, 실제 충전시설 설치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해 후회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덕양구 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허가가 된 만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	○ 지적도와 건축물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행정청의 처리 절차에 대해 질의함. 추가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한 기준을 질으하고 단속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함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도로굴착 허가부터 나간 부분에 대해 지적함. 민감한 사항들은 건축허가 이후 도로굴착 허가를 진행해 허가 이전에 도로 굴착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도로 굴착 시 꼭 부서에서 입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최근 일산동구 일대에 사기성 내용을 현수막에 걸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행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 인력적 제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뿔리 현수막들을 제거하고 과태료 조치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잘못된 현수막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덕양구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데, 일산동구 문봉동 및 식사동 데이터센터 모두 건축허가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함 ○ 눈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제설제를 살포할 것이 아니라 언덕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들에 우선적으로 살포하고 과도하게 살포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최근 극한호우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받이에 낙엽이 쌓여 침수되는 일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낙엽 제거 등을 진행해 주기 바람 ○ 사업자들이 본인들 구역의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엄정하게 단속해주기 바람 ○ 백석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 초기에 입주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보도블럭 사이로 뿌리가 깊고 두꺼운 잡초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면밀히 관찰하고 예초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 지역 내 기계식 주차대수에 대해 질의하며, 기계식 주차장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람 ○ 부서에서 주차장 입체화 용역을 진행 중인데 주정차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별 주정차 발생 건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함.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주정차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해주기 바람
일산동구청 (건축과)	○ 대봉골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함. 점검 빈도수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최근 일산동구 일대에 사기에 가까운 내용을 현수막에 담아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함, 인력 동원에서 한계가 있더라도 불법 현수막은 게시 즉시 제거 및 과태료 조치하여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게시된 대형 불법 홍보 현수막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 사안인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각 구청별로 불법 대형 현수막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관리 규정에 대해 통일된 단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작년에 불법 현수기 및 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이후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현수기라 하더라도 불법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함 ○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 현황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주기 바람 ○ 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일산동구가 덕양구보다 사업대상지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GB 행위허가 신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이용하는 경우 건축주와 토지소유주 간의 토지사용승낙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함.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GTX-A 4번 환기구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데, 일 2,000톤에 가까운 유출수로 조경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하천수질개선 방안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 덕이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오랫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는데도 부서에서 거리 이격, 민원 최소화, 차폐판 강판 추가 등 노력을 해준 덕분에 지금은 주민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건설 업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 실태조사 미실시로 2024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노후화가 된 시설,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함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상황에 따라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대해 일시적인 시간 조정 방안까지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함 ○ 중앙로 버스정류소 쉘터 청소를 연 3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청소 상태가 미흡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중앙로 쉘터 청소 횟수를 확대하거나 청소 방식·관리 기준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서구청 (건축과)	○ 정당 현수막을 빙자한 불법 현수막을 비롯, 불법, 사기 사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주민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지적함. 향후 이와 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철거 조치해주기 바람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	○ 창릉 3기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용량이 2배 증설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창릉과 같은 3기 신도시인데, SK 하이닉스 연구원이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때 다른 3기 신도시 지역들과 다르게 고양시만 별도의 자족시설이 없는 부분을 지적함. 고양시의 입지는 서울시와 가까우면서 과천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기업 입주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면밀히 협력해주기 바람 ○ 320억 원의 감정가를 보이는 식사 체육공원에 대해 1심에서 160억 원만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고양시 내 중요소송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함. 당시 지구 준공 과정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귀속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를 해태한 것임. 항소심에서 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해 온전한 값어치를 받아올 것을 당부함. ○ 언론보도를 통해 창릉 신도시 지구 내 다수의 매립 폐기물이 존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립 폐기물 위에 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음. 창릉 3기 신도시의 경우 국토부와 고양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LH가 공공기관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LH에 요구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벌말마을의 경우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내 유일하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주변 지역과 4~5m 단차가 나기 때문에 현재도 빈번히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람 ○ 식사 체육공원의 경우 법원에서 채권의 50%만 허가해준 이유 중 하나가 소유권 확보 미흡임. 이는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의 숙원이자 염원인 시설 사용을 위해 임시 사용승인 등 대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강구해주기 바람 ○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의 경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과가 결정되는 만큼 별도의 불필요한 시간과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 법률자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대행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질의함. 고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 설정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굳이 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서 무리한 요구사항이 더 생겨 현재 3년째 인허가가 나오고 있지 않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인데, 해당 자문회의 당시 제대로 조합원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함 ○ 삼송취락지구는 국토부 훈령에 막혀 20년째 제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비가 새고 난방이 안 되는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시에서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 주민들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재수립 소요가 발생하면 삼송 취락지구를 포함시켜 주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 원당 6, 7구역을 GH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7구역은 민간개발 주민제안을 한 상태인데, 현재 공공과 민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중재를 통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공공의 경우에도 경기도라고 기한 없이 입안 제안을 기다리지 말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 바람 ○ 일산 도시재생사업 관련 본 의원의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부서가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음. 반박보도자료가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2022년 당시 고양시가 LH에 보낸 공문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 공문에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함 ○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 고양시의 정책 방향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사업의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그럼에도 부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부결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한 무모한 행정에 대해 지적함. 이후 경미한 용도변경을 사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다음에도, 대학생 특화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H와 임대료 손실분 보전 차이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다 최종적으로 청년주택 비율을 90%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는 결국 시장 정책 방향 변경에 맞추기 위해 소극적 행정을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일산문화예술창작소 매입에 60억 원, 리모델링에 도비 17억 원, 시비 5억원 등 총 80억 원이 투입됐는데 단순 대관 사업만을 하는 것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 내년이면 개관한 지 3년이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함.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공사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반드시 효과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주기 바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개정되어 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이 들어올 경우,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불상정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문의 취지에 맞게 대상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해주기 바람 ○ 성사혁신지구 생활 SOC 사업 관련해서 북카페를 계획중인데, 이와 관련해 인근 화정 도서관 등과 책들을 서로 빌려서 볼 수 있도록 상호대차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설계 변경 방안 등을 마련해주기 바람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	○ 산황동 스프링힐스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대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업 승인을 받고 아무런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함. 해당 사업이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장기 미집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함 ○ 산황동 스프링힐스는 2023년 인가 미승인 당시 미승인 사유에 대해 질의함.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시정질의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에서 인가 당시 6개월이 경과해서 무효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접수 당시인 2025년 1월의 경우를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접수 여부를 따져야하고, 이 부분이 문제 없기에 인가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함 ○ 민선 7기 때 여러 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산황동 스프링힐스 증설 신청서를 반려시켰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 미승인하였음. 증설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시켜 놓고 막상 환경영향평가 만료일인 7월 경에 미승인하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음. 결국 사업 신청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함. ○ 2023년 스프링힐스 증설 관련 최초 신청 당시 서류 접수조차 안 받은 조건을 민선 8기 들어 서류 신청 받은 것 부터가 문제임. 최초 고양스포츠 등 1~2명이 사업자였는데, 2025년 새로 신청할 당시에는 거의 9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사업자 지정을 확대한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음. 스프링힐스는 외곽 지역이 아니라 유치원, 민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설이 굉장히 우려스러움 ○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과 사업 시공사와 이를 중재하는 고양시 3자 간의 문제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들에게 일체의 추진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의회가 산황산 골프장 증설분에 대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하면 시장은 5항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의회에 별도의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것은 위법한 행정임을 지적함 ○ 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해제 권고와 관련 부서가 내부검토한 자료는 시행령에 명시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이행의 전제조건이므로 국계법 시행령의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함. 추가적으로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되는 재검토 내용은 기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시행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함 ○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 새로운 성장관리계획 안의 규제가 기존보다 과도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함.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향후 적극 반영해주기 바람 ○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방향성과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시민들이 충분히 감내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기를 바람. 향후 주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산황동 스프링힐스 증설의 상위계획은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인데, 해당 계획의 취지는 그린벨트의 보존임. 현재 산황산 녹지등급은 6~7등급이나, 골프장 증설에 따른 계획은 3~4등급으로 현재 산황산 녹지등급이 더 높다는 점에서 산황산을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 없이 미해제를 결정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형해화 내지 무력화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답을 받았음. 이를 근거로 집행부의 결정은 위법한 행정임을 지적 ○ 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자금조달계획 역시 실시계획인가 당시 자금 확약서의 효력은 이미 실효된 상황임을 확인함. 이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위법한 행정이라는 답을 받은 만큼, 시의 행정 절차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함 ○ 2023년도 미승인 사유인 토지 수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지적함. 이는 개특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토부 중토위에서도 공공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사항임 ○ 덕이지구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덕이지구 쓰레기 집하시설과 관련 기부채납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갑작스럽게 국유지 유·무상 귀속 협의 문제가 등장한 것은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임. 2007년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 무상귀속 내용이 포함되어 오해가 생기게 만든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고양시가 조합과 상급기관인 경기도, 조달청 사이에서 적극 중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요진 Y-CITY 복합개발 관련하여 초과이익 환수 용역을 통해 당초 받은 금액보다 868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요진과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꼭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이행해주기 바람 ○ 산황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실시계획인가가 2025년 6월 17일 났는데, 실시계획인가 6일 전에 분묘 이장 공고가 나왔다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음.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항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우며, 무언가 확신이 있어 공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됨. 행정 곳곳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인가 이전에 이장 공고가 난 점은 행정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인 고양시가 주장한 금액에서 어떠한 부분이 감하여졌는지 질의함. 항소심 최종 변론까지 마친만큼 향후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판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공유해주기 바람 ○ 집행부에서 2018년 당시 “각각 공동 사업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 사업자로 지정하여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자문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담당부서에서 공동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화정배수지 저수조 보수공사는 이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향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함. 향후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시민분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주기 바람 ○ 소규모 주택 상수관로 교체사업 요건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질의함.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경기도에서 적게 배정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기 때문에 경기도 측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거나 자체사업을 실시해서라도 사업을 확대 운영해주기 바람 ○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내 약수터 수질에 대한 지적을 한 이후 2개의 지정 약수터가 폐쇄되어 지정약수터가 11곳에서 9곳으로 감소하였는데, 여전히 운영 중인 약수터 중에 수질이 더 좋지 않은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폐쇄 검토 기준을 획일화하여 수질이 좋지 않은 약수터는 적극 폐쇄를 검토해주기 바람 ○ 능곡동 명림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54세대 모두가 수압이 낮아 급수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벽제수질복원센터는 기존 계획보다 이르게 가동할 예정인데,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함. 증설계획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주민설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추후 주민설명회가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현재 고봉동 지역의 28% 정도가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데, 막상 벽제수질복원센터는 고봉동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양이 더 많음. 가동률이 94%에 달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3단계까지 증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 분들의 여유분까지 생각해서 고봉동 지역 몫을 마련해주기 바람 ○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함. 현재 선정 방식의 경우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은데 향후 선정 방식에서는 정량평가 비중을 상향해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창릉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화전과 대덕 지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상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사업 진행을 당부함 ○ 신기술 특화공법과 관련해 성남이나 인천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고양시의 경우 특허 관련 공사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질의함. 최초 공사비가 비싸더라도 유지보수율이 낮아져서 최종 공사비는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향후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 바람 ○ 2025년도 자체감사 결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스템 현행화를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는데,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 현행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교통국 **(교통행정과)**	○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함. 식사 트램사업이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식사 트램과 관련해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증가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임. 부서에서 LH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증액 요청을 해 LH의 분담금 증액을 이끌어주기 바람 ○ GTX-A 창릉역의 경우 고양시가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있음. 앞으로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상급기관에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해주기 바람 ○ 최근 버스 준공영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 있음. 마을버스의 목적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인데,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가 교통소외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함. 마을버스 존재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심도 깊게 고려해주기 바람 ○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2025년 1월 기획재정부 1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B/C 값이 기대치를 밑돌았음. 하지만, B/C 값이 높은 곳에만 철도가 들어온다면 철도 교통소외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소외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성만으로 사업 추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향후 이와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 개진하여 주기 바람 ○ 교외선이 재개통한 이후 원릉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외선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음의 범위가 법에 허용된 규정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측에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해주기 바람 ○ 고양은평선 식사 지역 연장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질의함.
교통국 **(버스정책과)**	○ 덕은, 향동, 풍동 2지구, 창릉 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고양시 관내 버스 노선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의함 ○ 똑버스 운행 시 호출 방식에 대한 주민 불편이 다수 있는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기 바람 ○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의함. 올해 지자체 재원 문제 때문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 확보에 힘 써주기 바람 ○ 광역버스 중간 배차 사업은 주민 호응이 매우 좋다는 점에서 부서의 노력에 감사함. 누리버스나 똑버스의 경우 버스 노선이 한정적인 교통 소외지역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버스 노선 개편 용역 과정에서 교통 소외지역으로의 배분 등을 고려해주기 바람 ○ 스마트쉘터에 대한 주민분들의 호응이 매우 좋음.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 스마트쉘터를 확충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자유로 덕은지구 버스정류소 신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류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GTX-A 노선 개통 이후 자유로를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의 이용률이 15% 정도 감소했는데, 혹시 해당 노선을 버스 수요가 더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함 ○ 풍동 엘로이 지역 버스정류장은 현재 설치는 완료됐지만, 정류장 내 전기가 인입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람 ○ 저상버스와 전기버스 도입 예산 중 이월예산이 많은 점을 지적함. 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람 ○ 저상버스와 전기버스의 경우 이월뿐만 아니라 집행잔액 역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 수요조사 계획을 잘 세워 주기 바람.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람 ○ 원당공영차고지 설계용역이 중지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일각에서 사모펀드가 사적 이익만을 편취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 향후 협약이나 조례 입안 단계에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준공영제를 진행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교통국 (주차교통과)	○ 최근 이음택시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향후 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에 신경 써주기 바람 ○ 일산시장 앞 공영주차장의 경우 경기도 소유인데, 현재 사고로 인해 전체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일산시장의 경우 시장 이용객이 많고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만큼, 추후 유지보수 공사가 GH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경기도와 원활하게 소통하여 상인분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 고밀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상생 주차장, 학교 주차장 부지 활용 등은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확대해주기 바람 ○ 2025년 5월 상위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 충전시설 확보에도 힘 써주기 바라며, 잉여 전력 활용 방안 등 유지관리 방안까지 철저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함 ○ 벽제동 웅산자원 인근 유휴부지 내 주차장 조성을 3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웅산자원의 불법점용에 대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함. 향후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유휴부지 내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분들끼리 다툼까지 일어나는 일이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음. 고양시 역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향후 상생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이동약자 교통수단 지원과 관련해 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이동약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외 배차비중을 줄이고, 특별교통수단 증차하는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장 조성 예정 건물에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별도의 활용계획을 미리 세워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함. 고양시 내 자족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 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함. 부서에서 향후 고양시 내 주어진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잘 도출해주기 바람 ○ 국토부에서 고양시에 할당한 택시 물량에 따르면 앞으로 전체의 20%가 넘는 670여 대를 감차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차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명확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차 사유에 따라 명확하고 빠르게 택시 운전자들과 논의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향후 택시 수요 감소로 주민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정발산 지역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주차 밀집도와 불법 주정차 대수가 고양시 내 최고 수준임. 특히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밤가시공원이 대상 부지로 제일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경우 현재 2인 1주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화물차의 경우 주차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자연부락쪽에 주차를 하게 됨. 자연부락 지역은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어둡고, 이면도로가 다수 존재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장 수요가 없는 호수공원이나 종합운동장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의 경우 준공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는데, 현재까지 별도의 전기차 충전기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함. 고양시 조례에 주차면수 50대 이상인 경우 5퍼센터 이상의 전기차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 허가의 총괄부서로서 전기차 충전시설 등 부차적인 요건들까지 다 고려하여 신중하게 주차장 허가를 내주기 바람
교통국 **(도로정책과)**	○ 파주 운정 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김포 - 관산 간 도로의 경우, 고양시민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큰 필요성과 이용률이 떨어져 보임. 이는 결국 파주 운정지구의 교통량을 받아주는 개념인데, 고양시의 시비 1,5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을 지적함 ○ 부서에서 검토한 교통환경 역량평가 자료에 따르면, 김포 - 관산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고봉동, 관산동 및 고양시민들의 편익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고양시가 해당 구간의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고양시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대광위 등 여러 경로로 부담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이미 협약을 맺은 이상,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고양시에 해당하는 김포 - 관산 고속도로 2개의 구간 중 1구간만을 먼저 사업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1구간은 구간이 길어 보상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혹시 향후 2구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2구간 공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는만큼 2구간 먼저 사업을 해야하기에 비용 부담도 해달라고 주장해주기 바람. 최소한 1구간과 2구간이 비슷한 시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협의해줄 것을 당부함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덕양구의 경우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 열악하고, 개선 소요가 많으므로 향후 도로망 등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와 면밀하게 협조해주기 바람 ○ 일산대교 무료화 진행 시 고양시가 분납해야 되는 추정금액에 대해 질의함. 39호선 우회도로, 화정-도래울 도로 및 화정-대곡-곡산 도로 등 고양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양시 내 도로 개설 추진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주기 바람 ○ 작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체계 간소화 개선요구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신고체계가 바뀐 부분은 없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 분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기에 단순히 단속을 넘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설정을 위해 경찰청 협의를 요청함 ○ 도로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과거 위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2010년 권익위는 위법한 사람을 위촉직에서 즉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권고한 바 있음.이에 부서에서도 해당 위원의 위원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치해 주기 바람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 지연되고 있음. 기존 실시계획인가 상에는 2026년 말까지 택지 조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속도로는 2027년 말까지 가능한지 의문임.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용역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방송영상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목적이 다른데 용역을 중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5,6월 입주의향 수요조사에서 최초 조사 대비 기업 입주수요율이 낮아졌는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최초 계획에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컨텐츠 등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과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므로, 당초 취지에 맞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해주기 바람 ○ (김해련, 고덕희의원)고양 일산 ○○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함. 고양시 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나 의혹이 없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취지를 살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	○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전반 및 분양 현황에 대해 질의함 ○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함 ○ 행주산성 역사공원 관련 김 박물관 관계자에게 토지보상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며, 고양도시관리공사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혀 오해를 해소해주기 바람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정비처)	○ 고양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함 ○ 고양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타 지자체 대비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함. 수소버스나 수소차량 보급 현황 및 속도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임. 향후 정부 정책 방향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까지 분석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현재 친환경 보급 속도에 비해 사업이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처)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에 경기도에서 지원금액이 삭감되어 임차택시가 올해 13대에서 3대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운전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럴 경우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지금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모자란 상황이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예산 지원 비율이 3:7인데 30%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원 비율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임차택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의 수를 13대에서 3대로 줄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 2025년 5월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비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관내 공공주차장 94개소 중 40개소가 설치 기준에 해당됨. 고양시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공공설치나 민관 공동설치 혹은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 공공 시설물 공사의 진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기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미 많이 늦어진 만큼 공사 진행 상황을 잘 챙겨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용두동 웃말, 아랫말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보상 중인데 공정률을 40%로 표기한 부분을 지적함. 향후 자료 작성에 유의해주기 바람 ○ 화전취락(중로3-162)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까지 다 진행이 된 상태임에도 2023년부터 2년이 넘게 중지되어 있고, 효자동의 경우에도 소로 1-100, 3-258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국·도비 혹은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더 이상 지연되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진행되던 사업들이 추후 지연되게 되면 그 지연에 따른 책임과 그로 인한 예산의 증액은 집행부에게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람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 교량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단계별 절차에 대해 질의함. 교량은 시의 기초적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면밀하고 꼼꼼히 점검 및 진단해주기 바람 ○ 노후 교량의 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과정에서 안전점검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등급이 하락한 대상지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 및 보수해주기 바람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호우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보도블럭이 일어나는 등의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면밀한 시공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발생했을 때 2년 이내에 새 차를 취득하면 기존 차량으 출고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면제받는데, 올해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음에도 지원 대수가 58대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의문임. 향후 해당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 11월 14일(금)부터 11월 21일(금)까지 8일간 도시주택정책실을 비롯한 2개 국, 2개 사업소, 3개 구청, 4개 담당관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평가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8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22일과 23일, 2일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대화동 GTX-A 임시 환승주차장, 식사지구 체육공원, 문봉동 데이터센터, LH 고양사업본부 등 총 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음.

○ 특히 건설·교통 분야는 자족도시 구현 및 108만 시민의 안전 및 생활민원 등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불필요한 경관 심의 방지, 홍수 및 씽크홀 예방 방지 대책 수립,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 방안 마련, 내실 있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 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 수행 철저,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속 및 관리 철저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 시민 불편을 초래하여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 특히, 집행부가 추진하는 용역 보고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현황

구 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합 계		84	
공통(건설교통위원회)		1	
도시디자인담당관		7	
시민안전담당관		2	
재난대응담당관		3	
신청사건립단		3	
도시주택정책실	소계	16	
	도시계획정책관	7	
	주택과	2	
	건축정책과	4	
	토지정보과	2	
	스마트시티과	1	
교통국	소계	12	
	교통정책과	3	
	버스정책과	3	
	주차교통과	3	
	도로정책과	3	
도시혁신국	소계	12	
	신도시정비과	4	
	도시정비과	4	
	도시개발과	4	
상하수도사업소	소계	5	
	수도행정과	-	
	수도시설과	2	
	하수행정과	3	

도로관리사업소	소계	5	
	공사과	2	
	도로관리과	2	
	차량등록과	1	
덕양구청	소 계	4	
	안전건설과	1	
	교통행정과	1	
	건축과	2	
	건축물관리과	-	
일산동구청	소 계	6	
	안전건설과	2	
	교통행정과	2	
	건축과	2	
일산서구청	소 계	4	
	안전건설과	2	
	교통행정과	1	
	건축과	1	
고양도시관리공사		4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4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공통 (전 부서)	□ **상임위 대상 안건 및 예산 사전 설명 당부** ○ 원활한 안건 및 예산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안건 및 예산 심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진행해줄 것 ○ 또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함
도시디자인담당관	□ **용역 추진 상임위원회 대상 용역보고회 등 소통 요구** ○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경우 지금까지 용역 추진 시 상임위원회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이력이 없음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착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용역 착수 시 상임위원회에 용역 보고회를 진행해주기 바람 □ **선도적 건축 문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활용** ○ 민간 건축물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공 건축물의 경우 시를 상징하는 건축물로써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 향후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 및 부서 간 협의 누락 경고** ○ 간판 정비사업 등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 포장 등으로 사업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타 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통합심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 지연 시정 ○ 정부의 통합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심의를 고수하여 인허가 기간을 지연시키는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즉시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소극적 운용 행태 개선** ○ 현재 기금의 경우 잔액을 단순 입출금 계좌에 예치하여 운용 중임 ○ 하지만, 기금의 경우 향후 지출에 대한 계획이 예측 가능하기에, 기금 잔액을 단순히 입출금 통장에만 예치하지 말고,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운용 계획을 수립할 것 **□ 불법 현수기 난립 방치 및 형식적 단속 시정**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현수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음에도, 크게 바뀐 점이 없음 ○ 당시 현수기에 대한 문제제기의 초점은 도시미관 저해임에도 1년만에 게시 가능 공간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최초 문제제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향후 도시미관까지 고려하여 현수기 게첩에 대한 종합적이 계획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 **□ 고양시 상징물(시기) 부재 장기화 해결** ○ 민선 8기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현재까지 지자체의 상징인 시기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고 즉각 제작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시민안전담당관	□ **재난관리기금의 적기 집행 소홀 시정** ○ 재난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기금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음. ○ 신속 집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즉각적인 집행을 해주기 바람 □ **가설건축물 안전 점검 사각지대 해소 조치** ○ 공공 공사현장, 민간 공사현장에 대한 부서의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설건축물의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건축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규모가 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검까지 해줄 것을 요청함
재난대응담당관	□ **상습 침수지역 방지시설 미설치 가구 발굴** ○ 극한호우가 예측할 수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저지대 지하 주택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미진한 곳이 없는지 파악하여 우기 전 설치를 완료해주기 바람 □ **우수관로 용량 부족 구간 증설 계획 마련** ○ 일부 주민들은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주원인이 우수관로 용량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함 ○ 향후 우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공사 및 준설 계획을 마련해줄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현실화** ○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 수혜 실적이 저조함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등 실제 시민 수요가 높은 항목을 특약에 추가하는 등 향후 보장 내용을 개편할 것 □ **허위 과장 광고 방치 및 주민 피해 예방 조치** ○ 덕이동 등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 반려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가 횡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할 것 □ **상위계획 마련 이후 성장관리계획 변경 요청** ○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성장관리계획을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도시기본계획 마련 이후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해주기 바람 □ **주요 개발사업 의회 미공유 및 독단적 행정 시정** ○ 백마역세권 개발 등 시의 중대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용역을 강행하는 시의회 패싱 행태를 지적하며, 향후 시정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훼손 시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결재권은 제2부시장에 있음 ○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를 규정에 맞지 않게 도시계획위원 중 1인에 불과한 도시주택정책실장이 실시함 ○ 이는 특정 사업을 위해 위원회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불투명한 운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 **□ 부적격 위원 위촉 및 선출직 위원 부당 해촉 시정** ○ 과거 비위 사실이 있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선출직 시의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자의적으로 하는 행태를 시정하고 원상복구 할 것 **□ GB 해제 취락지구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대책 강구** ○ 수십 년간 규제로 고통받은 GB 해제 취락지구 주민들을 위해 단순 계획 수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함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요구**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부서에서 사업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음 ○ 민간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시가 민간의 개발사업을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대변해주는 것 같아 보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함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당부** ○ 최근 일산동구와 서구 인근에 허위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반값 아파트’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극적인 조치 해주기 바람 □ **승강기 교체 지원의 지역 균등 배분 요구** ○ 의무관리대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의 경우 2025년 지원 대상지에 덕양구는 한 곳도 없음 ○ 덕양구가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공공주택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노후 공동주택 비율에 맞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 **제3종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당부** ○ 매년 증가하는 제3종 시설물 및 주의관찰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보강 조치 명령 등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이행할 것 □ **건축 분쟁 소극 대응 개선** ○ 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갈등에 대해 사적 영역이라며 방관하지 말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도시주택정책실 (토지정보과)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홍보 철저** ○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의 지원 실적이 직전 2개년에 비해 저조해 보임 ○ 다양한 경로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해당 보조금 사업 여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 **데이터센터 안전성 검토 부실 지적** ○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유류저장고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흡한바, 관련 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 □ **공문서 내 부적절한 용어(투기 등) 사용 금지** ○ 적법한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토지 투기’ 등의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용어를 향후 공문서 및 보고서에서 수정해주기 바람 □ **개발부담금 관련 산정식 등에 대한 홍보 철저** ○ 복잡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실태임 ○ 향후 사업자에게 산정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산정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자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도시주택정책실 (스마트시티과)	□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예산 효율성 재검토** ○ 시비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시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민 체감 효과가 불분명한 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신청사건립단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정 절차 위반 문책** ○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서에 사실과 다르게 ‘타당성 조사 완료’라고 허위 기재한 사항과,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시정할 것 □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 의회의 예산 삭감 취지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법으로 집행하거나 추경 예산 편성 절차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백석 이전 고집에 따른 행정력 낭비 중단** ○ 사실상 불가능해진 백석 이전을 고집하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즉각 정상화하여 재개할 것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 **대형 공사장 안전 관리 감독 소홀 시정** ○ 데이터센터 등 대형 공사장의 발파 소음, 진동 피해 및 고압선 매설 깊이 등 주민 안전 위협 요소를 방치하지 말고 엄격한 자체 관리 기준을 수립·적용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 **골목상권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방안 모색** ○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덕양구청 (건축과)	□ **GB 내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기준 확립** ○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오락가락하여 특혜 시비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환경적 관점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충전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된 인허가 기준을 즉시 수립할 것 □ **반복적인 업무추진실적 자료 제출 시정 요청** ○ 지역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건축 관련 재능기부를 업무추진실적이라 표기하였는데, 그 실적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9건에 불과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업무추진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업무추진실적 자료 작성 시 반복적인 작성을 지양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 **행정 절차를 무시한 도로굴착 허가 시정** ○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가기 이전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음 ○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먼저 내주는 앞뒤가 바뀐 행정 처리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간 업무 협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 □ **무분별적인 제설제 살포 지양** ○ 눈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도로 시설물이나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험도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양의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	□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실 시정** ○ 방치되거나 창고로 전용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적법 조치를 취할 것 □ **지역 내 동별 주정차 발생 건수 확인 요청** ○ 일산동구의 경우 특히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 입체화 용역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주정차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동별 주정차 발생 건수를 파악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일산동구청 (건축과)	□ **불법 현수막(사기성 광고) 단속 철저** ○ 시민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사기성 회원 모집 현수막이 난립함에도 인력 부족을 핑계로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봐주기식 점검 지양** ○ 대봉골재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빈도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말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 **시설물 안전 점검 누락에 따른 안전 불감증 시정** ○ 2024년도 감사에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법률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미실시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 점검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유출 지하수 활용 대책 미비 보완** ○ GTX-A 노선 개통 이후 발생하는 대규모 유출 지하수를 조경용수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 **골목상권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방안 모색** ○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라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일산서구청 (건축과)	□ **정당 현수막 빙자 불법 광고물 정비** ○ 정당 현수막을 빙자한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상업 광고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 즉시 철거할 것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	□ **기부채납 시설(식사 체육공원) 재산권 상실 대응 미흡 질타** ○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고양시 소송과 관련된 조례에 따른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인해 시 자산 가치의 50%를 상실한 책임이 있음 ○ 더욱이 지구 준공 과정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귀속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총력을 다해 시의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할 것 □ **창릉지구 내 불법 폐기물 매립 방치 시정** ○ 3기 신도시 사업 지구 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및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관로 공사 강행에 대해 LH에만 미루지 말고 시 차원에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 □ **창릉지구 내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 창릉 신도시와 같이 부천 대장지구의 경우 창릉과 같은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고양시도 서울시와 인접하여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입주를 통해 자족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 상급기관과 논의해주기 바람 □ **지구 지정 제외 지역(벌말지구) 침수 피해 방치 시정** ○ 창릉지구 조성에 따른 단차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향후 지구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재발방지 요구** ○ 고양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건부 승인 후 재차 자문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사업이 3년째 표류되어 있음 ○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조합원들 목소리 반영해주기 바람 □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정책 혼선 시정** ○ 일산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2022년 당시 고양시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LH에 보낸 공문 상에는 ‘상업시설로의 용도변경’이라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부서에서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이처럼 시장의 결재 문서와 배치되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정정 보도 요청 **□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운영 파행 시정** ○ 일산문화예술창작소 매입에 60억 원, 리모델링에 도비 17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하고도 운영자가 없어 단순 대관 사업만 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무능 행정을 질타함 ○ 향후 단순 대관 시설이 아닌 당초 목적에 맞는 운영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 **□ 공공-민간 개발 갈등 중재 당부** ○ 원당 6, 7구역에 대해 GH에서 개발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나 7구역은 민간개발 주민제안을 한 상황임 ○ 이로 인해 공공과 민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에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	**□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위법 행정 직권 취소 요청** ○ 의회의 해제 권고를 무시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실시계획인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가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 □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위법 행정 지적** ○ 국계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한 부분에 대해 5항 “지자체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회에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기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것은 위법한 행정임 ○ 또한,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이후 의회에 소명한 내용은 국계법 시행령에 명시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산황동 골프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함 □ **요진 Y-CITY 초과이익 환수 적극 추진** ○ 초과이익 환수 용역 결과 밝혀진 수백억 원대의 추가 환수액에 대해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중요소송으로까지 지정해서라도 꼭 초과이익 환수조치를 이행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덕이지구 미등기 상태 해소 방안 마련 촉구** ○ 2007년 이후 방치된 쓰레기 집하시설 문제로 인해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은 바 있음 ○ 덕이지구 쓰레기 집하시설 문제 해결 이후, 농림부 부지 유·무상 귀속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부서에서 해당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라 생각함 ○ 향후 대지권 등기가 생길 수 있도록 고양시가 조합과 상급기관인 경기도, 조달청 등과 적극 중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수질 부적합 약수터 방치 시정** ○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내 약수터 수질 문제에 대해 지적한 이후, 2개의 지정 약수터가 폐쇄되어 현재는 9곳의 지정약수터가 운영 중임 ○ 그러나 여전히 운영 중인 지정 약수터 9곳 중에 폐쇄된 약수터보다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 있음 ○ 이에 시민 건강을 위해, 기준 부적합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 조치할 것 □ **급수 불량 지역 해소 방안 마련** ○ 능곡동 등 연립주택에 수압이 낮아 급수가 되지 않는 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급수 불량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기피 시설(벽제수질복원센터) 주민 소통 부재 시정 ○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행정을 지적함 ○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 □ 신기술 특화공법 적극 적용 당부 ○ 성남이나 인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고양시의 경우 특허 공법 활용 공사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공사비가 일반 공사에 비해 비싸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율이 낮아져서 최종 공사비는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향후 신기술 및 특허 공법을 배제하지 않고 적극 적용 방안을 마련해줄 것 □ 위탁업체 선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현재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과정 방식의 경우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음 ○ 주관적 개입 소지가 다분한 정성평가 위주의 선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정량평가 비중을 높여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교통국 (교통정책과)	□ 교외선 운행 소음 피해 대책 마련 ○ 교외선 재개통으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이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 내라고 하더라도 주민 불편이 지속적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측에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주기 바람 □ **경제성 논리에 매몰된 철도망 계획 수정 요구** ○ 인천 2호선 연장 등 시민 숙원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BC) 논리로만 접근하여 포기하지 말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상급 기관을 적극 설득할 것 □ **철도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선정 요청** ○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과 식사 트램 사업의 노선이 일정 부분 겹치는 것 같아 우려스러움 ○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교통국 **(버스정책과)**	□ **버스정류장 전기 미공급 등 부실 시공 시정** ○ 풍동 엘로이 지역 등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도 전기를 인입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관내 버스정류장 전체에 대해 현황파악을 통해 미비 시설을 보완할 것 □ **버스 보조금 예산 과다 이월 시정** ○ 매년 반복되는 저상버스 등 보조금의 과다한 불용 및 이월은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 수요조사 계획을 면밀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함 ○ 향후 금액 이월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교통국 (주차교통과)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것 ☐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공공성 안전장치 마련** ○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사적 이익만을 편취하고 매각하는 사례가 있음 ○ 향후 협약이나 조례 입안 단계에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준공영제를 진행해주기 바람 ☐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임차택시 축소 대안 마련** ○ 예산 삭감을 핑계로 교통약자의 발 격인 임차택시 운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처사임 ○ 향후 별도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임차택시 축소에 대응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해줄 것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정** ○ 능곡시장 공영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에 조례상 의무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누락한 채 주차장 허가가 이루어짐 ○ 전기차 충전구역만으로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 허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여부까지 파악하여 허가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허가 과정을 즉시 시정할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교통국 (도로정책과)	□ **불법 점유 유휴부지(웅산자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웅산자원 인근 등 불법 점유로 인해 주차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 계고에만 그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것 □ **불합리한 도로 개설 비용 부담 재협의** ○ 고양시민 편익이 저조한 김포-관산 간 도로의 사업비를 전액 시가 부담하는 불공정한 협약을 재검토하고, 분담 비율을 재협의할 것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부실 책임 추궁** ○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보행 안전 위협이 심각함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음 ○ 향후 즉시 견인 조치를 넘어 운행 금지 구역 지정까지 검토해주기 바람 □ **부적격 위원의 위원회 참여 배제 조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비위 전력이 있는 부적격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즉시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실적 저조 대책 강구** ○ 부지 조성 지연과 저조한 앵커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 지적하며, 단순 MOU 남발이 아닌 실질적인 입주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수요를 체크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정비처)	□ **수소도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 미니 수소도시 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과 수소 차량 및 버스 보급 속도가 저조함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 가능한지 의문임 ○ 향후 정부 정책 방향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처)	□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임차택시 축소 대안 마련** ○ 예산 삭감을 핑계로 교통약자의 발 격인 임차택시 운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처사임 ○ 향후 별도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임차택시 축소에 대응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해줄 것 □ **공공주차장 내 태양관 시설 설치 효율화 방안 마련** ○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 향후 관내 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비 설치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 **자료 작성 유의 및 공사 지연**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상 단계임에도 공정률을 40%로 표기하였음 ○ 향후 공정률 등의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 수치를 부풀려 보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주기 바람 □ **공사 지연 방지 및 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촉구** ○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보상절차가 다 진행된 상태임에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지되어 있음 ○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신청하는 수동적인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도비 및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 **안전 등급 하락 교량 보수 지연 시정** ○ 안전 등급이 하락한 노후 교량에 대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등급이 하락한 대상지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 및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 철저**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호우의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보도블럭을 비롯한 도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음. 향후 면밀한 시공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 **침수 차량 세제 지원 홍보 태만 시정** ○ 집중 호우 피해 시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함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